

한반 및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김정은 고발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5회)

일 시 : 2018. 12. 4(화). 11:00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은 외면한 채 12월 중 김정은 답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고, 의하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달 15일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사실상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 우리 북한인권 피해자 및 단체들은 지난달 6일부터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로 형사고발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해 왔다. 이번이 마지막 차례가 된다.
3. 특히 오는 11일은 49년 전인 1969년 북한이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를 납치하여 50명의 승무원·승객을 억류하고 1970년 39명만 돌려보낸 후 아직도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다.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1983년 이래 북한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의 당사국 이므로, 불법납치를 당해 북한 영토에 착륙한 항공기의 승객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적절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4. 한편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엄격해진 국경통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인권지옥을 탈출해 오다가 중국 등지에서 불합허 강제복송 되고 있고, 강제복송 된 후 북한 당국에 의해 갖은 고문을 받고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에 보내지고 있다.
5. 이에 우리들은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인도범죄자로 형사고발하고,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재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18. 12. 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물망초, 북한전략센터, 자유북한방송, 피랍탈북인권연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등